

특별기고



정기연
前 영암신북초등학교교장

태양광 에너지 이용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게 되고 빛에너지를 받아 식물은 동화작용을 해서 자라며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살며, 이러한 동식물이 변한 화석 에너지가 석탄과 석유다.

태양에너지는 빛 에너지로 와서 지구에 복사열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며 복사열은 물을 증발시켜 구름을 만들고 구름은 비가 되어 내리며 이러한 물은 위치에너지로 변환되어 전기에너지가 되는 것이 수력발전이다.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는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이 있는데 가장 무공해 저렴한 발전이 태양광발전이다.

과학자들은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태양전지 반도체 패널을 발명 개발했으며 이것이 태양광 발전 패널이다.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명과 연구 추진은 실험 단계를 벗어나 실용단계로 발전했으며 야외에 있는 시설물에는 태양광 발전판이 설치되어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이용하고 있다.

요즘을 새로 건축하는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판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생산된 태양광 전기로 건물 내 전기필요량에 충당하게 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해 세계 각국은 꾸준히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패널 수출국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신축건물에 태양광 발전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다. 광주·전남에는 주택에 태양광 발전패널을 설치한 주택이 많으며 태양광 발

전 패널 시공설치 업체들은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현지답사하고 적지 확인 후 신청서를 받아 시공하는데, 광주광역시 에너지담당자에 의하면 정부보조비가 3KW를 기준으로 시공비는 630만 원이며 정부 에너지공단에서 시설비의 절반인 315만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100만 원을 보조 지원하며 나머지 215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 했으며, 2018년 광주시는 태양광 전기 설치지원 273건을 할당받아 홍보하고 수용가의 신청을 받아 업체에서 시공이 완료된 상태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태양광 전기설치 지원 사업을 모르는 일반 시민은 태양광 설치 업체의 판촉에 의해 700만 원에 설치하고 농협 용자로 20년 거주 원리상환으로 하고 있으며 전기는 태양광에서 발전된 전기로 충당됨으로 한전에 전기를 내지 않고 농협 원금 상환과 이자로 매월 6만여 원의 돈을 내는 것으로 계약하여 시공설치 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이 무료라고 선전하며 보급하는 판촉과 같은 맥락이며 결국은 시민 소비자가 태양광 전기 설치의 정부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태양광 전기 설치의 정부 지원 사업을 늘려 홍보하고 필요수요자는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으며 태양광 전기 설치가 되게 해야 한다. 정부는 복지국가 차원에서 전기자동차에 지원하는 이상으로 태양광 발전패널 제작과 시공비를 지원하고 본인 자부담을 줄

여야 한다.
가옥 옥상과 공한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판 발전으로 주택용 전기소요량이 충당한다면 에너지 절약 면에서 정부는 복지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며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국고 보조를 늘려 쉽게 설치하여 복지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전기자동차가 실험단계에서 벗어나 실용단계에 접어들어 제주도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시 50% 상당의 국고 보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 보조 사업이 농어촌 주택에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지원으로 시공 설치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패널 제작과 시공활용은 희망적인 선진화 사업이며, 이에 대한 재료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소재라 한다. 태양광 전지 패널은 반영구적이며 한번 설치하면 20여 년간 태양광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며 태양광발전 건설회사는 시공 후 AS를 5~15년간 보장하고 있다.

시설의 부품인 모듈과 인버터는 양질의 부품을 시공해야 하며 고효율 프리미엄 모듈로 국산 LG전자 250W를 선호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태양에너지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복지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전기에너지 선진복지 국가가 되게 해야 한다.

社說

소득주도성장의 미래

'성장 먼저냐 분배 우선이냐'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그런데 성장과 분배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고 있다. 1980년대 본격화된 세계화로 빈부 양극화가 지구적으로 퍼지면서 부의 지나친 불평등이 성장을 방해한다는 연구들이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을 넘는 불평등은 사회 불안과 경기후퇴를 낳는다는 주장이 진지한 반응을 얻고 있다. 성장과 분배는 어느 정도 같이 가는 관계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화에 앞장섰던 국제기구들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았다. 그 속에서 포용성장 개념이 등장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나누면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성장과 분배 과정에서 누구를 배제하지 않고 경제 활동과 결과의 포용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IMF 사태가 터진 1990년대 말부터 소득 불평등과 빈부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됐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말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에 66.12%로 가장 높았다가 IMF 위기 때부터 떨어졌다. 2016년 52.24%였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큰 요인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실질임금 증

균형이며, 이를 해소해야만 지속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포용성장은론의 하나다.

그동안 포용 성장이나 임금주도 성장을 시도한 나라는 적지 않다. IMF에 따르면 성장 수단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주로 썼던 아시아 국가 중 상당수가 포용성장 정책을 도입했다.

일본은 2차 아베노믹스에서 노동 친화적 정책을 폈으며, 중국은 12차 5개년(2011~2015) 계획에서 임금 수준을 두 배로 올려 저부가가치 수출 주도 경제의 체질 변화를 시도했다. 한국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일종의 임금주도성장론이다. 임금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많아 '임금' 대신 '소득'이라는 표현을 쓴다. 박근혜 정부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 세제, 기업소득환류 세제, 배당 소득증대 세제 등을 도입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과 부진, 정치 공세, 국민 공감 부족의 '3대 벽'에 부딪혔다. 정책 의도와 반대로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해지고 고용이 나빠지면서 시행 1년여 만에 사면초가다. 정책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고용과 소득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을 과소평가한 결과 같다. 보완이 시급하다.

저성장과 빈부 격차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다. 경제 구조와 계층 갈등에 비춰볼 때 이대로 가면 한국의 고질이 될지 모른다. 성장과 양극화 해소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잡으려는 두 마리 토끼다. 국민의 오랜 여망이기도 하다. 초기 성과를 반성한 뒤 2012년 내놓은 게 임금주도성장론이다. 세계 경제 저성장 원인이 임금 격차에 따른 소득 불

독자기고

9월 28일부터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

9월 28일부터 전체 도로에서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과거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지만, 지난 3월 2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전 차량 시행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현장에 입장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의 피해상태를 살펴보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즉, 안전띠를 착용했다더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통계에서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운전자 88.4%, 동승자 81.3%로 높은 편이었으나 뒷좌석 착용률은 14.8%에 그쳤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이 3.7배 증가하고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앞좌석 운전자와 동승자를 충격해 사망할 확

률이 7배 증가한다.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 원이며,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13세 미만 동승자는 6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차를 타면 제일 먼저 안전띠를 매는 습관부터 길러야 한다. 안전띠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이형석 무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독자기고

소음 없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자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정책방향이 인권중심으로 바뀌에 따라 불법집회시위의 발생 건수가 과거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성숙해진 집회 참가자들 의해 선진집회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간혹 내 목소리만을 내세우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집회시위가 열리곤 하는데, 가장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소음 문제이다. 현재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주변지역의 소음기준은 주간 65dB(데시벨) 이하, 야간 60dB 이하이며 기타

지역은 주간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이다. 70dB 정도의 공사장 소음만 들어도 귀가 멍멍해지고 다른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데, 업무는 물론 대화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강한 확성기 소음이 이와 비슷한 데시벨이다. 매 집회시위마다 경찰에서는 소음 관리팀을 편성, 소음을 측정하고 정도가 과할 경우 일시보관, 사용금지 명령 등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규제만으로는, 집회의 자유보장과 인권보호가 핵심

인 선진집회 시위 문화의 정착을 이룰 수 없다. 참가자들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시민들의 권리도 중요하다. 내 권리를 찾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당하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야말로 가장 진정성 있게 목소리를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백승진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편집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최무대리 제갈대중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면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세상을 읽는 바른신문' (A Good Newspaper that Reads the World). Features a large magnifying glass over a newspaper and a fountain pen. Text includes '전남도민일보' and '지역기자안내' with a table of regional reporters.

Table: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광산 | 부장 | 고훈석 | 010-9992-8212 | 강진 | 차장 | 전원빈 | 010-5470-4550
동구 | 국장대우 | 서기만 | 010-4602-0708 | 영암 | 국장대우 | 김희선 | 010-3631-1617
북구 | 부장 | 김정관 | 010-9464-2555 | 무안 | 차장 | 박정오 | 010-5189-5639
목포 | 국장대우 | 박성태 | 010-3602-5869 | 무안(남약) | 차장 | 김수형 | 010-3648-0281
신안 | 국장대우 | 박성태 | 010-3602-5869 | 영광 | 차장 | 김진 | 010-9221-0000
나주1 | 국장대우 | 김동철 | 010-3604-2611 | 여수 | 오승택 | 010-2080-6002
나주2 | 부장 | 김윤우 | 010-8835-0299 | 순천 | 동부권취재본부장 | 오승택 | 010-2080-6002
담양 | 국장대우 | 강종연 | 010-6297-7599 | 광양 | 오승택 | 010-2080-6002
곡성 | 부국장대우 | 심섭섭 | 010-3608-2634 | 고흥 | 남부권취재본부장 | 윤규진 | 010-2001-8078
구례 | 국장대우 | 심건식 | 010-4624-0005 | 함평 | 윤규진 | 010-2001-8078
보성 | 국장대우 | 김용욱 | 010-3602-8103 | 장성 | 부장 | 정윤섭 | 010-3640-6323
보성(별교) | 부장 | 박주홍 | 010-7135-1518 | 해남 | 유대성 | 010-5007-5983
화순 | 차장 | 남호경 | 010-3624-6785 | 완도 | 국장대우 | 유대성 | 010-5007-5983
장흥 | 국장대우 | 김정근 | 010-3601-3517 | 진도 | 부장 | 한길준 | 010-8265-8848